

홍콩 시위와 민주화: “일국양제(一國兩制)” 실험의 위기를 통한 민주주의 전환

최경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2019년 홍콩 시위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되어 중국정부에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와 도전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안겨주고 있다. 이번 홍콩 시위를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는 송환법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이지만, 홍콩이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측면에서 2014년 우산혁명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시행되어 온 “일국양제”가 지닌 모순과 맞닿아 있다. 한 국가 내에 서로 다른 체제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일국(一國)”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조가 “양제(兩制)”의 위기를 낳고, “양제”에 대한 홍콩시민의 요구가 “일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면서 일국양제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일국”과 “양제”의 충돌과 모순은 단기적으로는 홍콩정부와 홍콩시민, 홍콩시민과 중국 정부 사이의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영국 식민지 통치 이후 민주주의 없는 자유와 법치 및 경제적 번영을 향유하는데 만족하던 홍콩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홍콩의 정치발전에도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국양제의 모순 속에서 진행되는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시도는 중국의 국내적 통합성, 대만과의 통일(양안관계),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중국 자체의 민주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홍콩 시위는 중국과 홍콩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및 국제체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목 차

1. 문제 제기
2. 홍콩 시위의 발단과 전개
 - 가. 송환법 사태
 - 나. 시위의 전개
 - 다. 선거와 참여 민주주의
3. 일국양제의 모순
 - 가. 일국양제의 성격과 한계
 - 나. 반환 후 홍콩의 문제
 - 다. 일국양제의 정치적 위기
4. 홍콩문제를 둘러싼 갈등
 - 가. 민주주의와 법치
 - 나. 자치와 통일된 중국
 - 다. 인권과 주권의 충돌
5. 홍콩사태의 의미와 향후 전망
 - 가. 일국양제 속의 홍콩의 미래
 - 나. 홍콩과 양안관계
 - 다. 중국의 세계구상과 홍콩

1. 문제 제기

- ◆ 홍콩은 현재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2019년 송환법 사태로 촉발된 홍콩 시위는 그 규모와 지속 기간 그리고 공권력과 시민 사이 폭력적 대립의 강도 면에서 2014년 우산혁명을 비롯한 이전의 시위들을 능가함. 홍콩시위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대중국 압박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국내적 도전과 국제적 압력을 경험하고 있음.
- ◆ 홍콩시위의 직접적 계기는 홍콩에 있는 범죄피의자를 홍콩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다른 국가에 송환할 수 있는 송환법 제정을 홍콩정부가 추진한데 있음.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대만을 포함 중국 대륙 전체가 들어가면서 홍콩시민들은 가혹하고 자의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중국의 사법체계에 홍콩인들이 노출됨으로써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가 제약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
- ◆ 그러나 홍콩 정부가 송환법 폐기를 밝혔음에도 홍콩 시위가 보편적인 선거권에 기반한 직선제에 의한 행정장관 선출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더욱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2014년 우산혁명의 연장선 상에 있음. 근본적으로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적 불만과 홍콩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규모 시위를 야기한 원인으로 작용. 이는 일국양제에 의한 상이한 두 체제의 공존을 통한 통합방식이 내부적인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일국”을 강조하는 중국과 “양제”의 보장을 요구하는 홍콩시민 사이에 타협하기 어려운 갈등을 노정시킨 결과임.
- ◆ 홍콩 반환시 영국과 중국간에 합의된 일국양제는 자유와 법치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레닌주의적 일당 독재에 기반한 사회주의 체제의 통합을 위해 고안됨. 그러나 반환 이후 홍콩은 상대적인 경제 쇠퇴와 위상의 저하, 대륙과의 교류로 인해 야기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영국 식민지 하에서 민주주의 없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향유하며 만족하던 홍콩인들에게 민주주의 없이는 자유와 법치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정치적 자각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보편적 투표권과 직선제 선거를 비롯한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짐. 이 점에서 일국양제는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며 의도치 않게 홍콩의 민주주의적 정치발전을 향한 노력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2. 홍콩 시위의 발단과 전개

가. 송환법 사태

- ◆ 홍콩정부는 2019년 4월 3일, 찬통카이(陳同佳) 사건을 계기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추진. 이는 대만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주한 홍콩인을 대만으로 인도하려는 조치의 일환임.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며, 다만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20개 국가들과 범죄인 송환조약을 맺고 있음.
- ◆ 새로운 송환법 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홍콩법이 홍콩내 범죄 혐의자가 중국 대륙으로 송환되는 것을 금지했던 반면, 새로운 송환법은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및 마카오 등도 송환 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홍콩 정부는 300명 이상의 범죄도피자들이 홍콩에 살고 있으며, 새롭게 추진되는 송환법이 기존 홍콩법이 지닌 허점을 메꾸어 홍콩의 안전과 법치질서의 유지에 필요하다 주장.
- ◆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며 반발. 송환법이 통과되면 누구든 사소한 범죄 혐의만으로도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이 이루어지는 중국 본토로 압송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 대한 일상적 비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홍콩 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 주장. 이는 홍콩 사법부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홍콩의 자치권을 줄여 점점 더 많은 강권을 행사하려는 중국본토의 의도가 깔려 있다 비판.¹⁾
- ◆ 홍콩 시민의 반발에 직면하자 홍콩정부는 경제와 관련된 9개의 범죄를 송환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송환법이 7년 이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에만 해당될 것이며, 정치범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발표.²⁾ 그러나 홍콩시민들은 지금까지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에게 뇌물, 갈취 등 비정치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해 탄압해 왔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송환법의 전면적 철회를 주장.³⁾

기존의 홍콩법이 홍콩 내 범죄 혐의자가 중국 대륙으로 송환되는 것을 금지했던 반면, 새로운 송환법은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및 마카오 등도 송환 지역으로 포함

나. 시위의 전개

- ◆ 송환법 철회와 이를 추진한 캐리 램(林鄭月娥) 행정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로 시작된 시위는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더욱 거세지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됨. 6월 9일 백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일주일 후에는 홍콩 전체 인구인 720만 명 중에서 200만명이 참여하는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짐. 6월 15일 홍콩 정부는 송환법안의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위대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폭력이 증폭되어 시위대의 홍콩 입법회 의사당 침투와 경찰서 파손, 공항 봉쇄가 이루어졌고, 홍콩 당국은 최루가스, 물대포, 고무탄을 동원해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 및 체포.

시위대는 단순히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라, 행정장관 직선제를 통해 홍콩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우산혁명의 연장선 상에서 전개되는 민주화 운동임을 대내외에 드러냄

- ◆ 시민들은 2019년 9월 28일에 우산혁명 발발 5주년을 맞아 기념집회를 열어 시위의 대상을 홍콩 정부를 넘어 중국 정부로까지 확장. 중국 정부를 독일 나치에 비유한 ‘차이나치(Chinazi)’란 문구가 등장하고, 지하철역 바닥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오쩌둥(毛澤東) 사진을 붙이고 시민들이 이를 밟고 지나가는 퍼포먼스도 등장.⁴⁾ 또한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 시위에서 미국, 영국 등 74개 민주주의 국가의 국기와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깃발 등을 들고 행진함.⁵⁾ 이를 통해 시위대는 단순히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라, 행정장관 직선제를 통해 홍콩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우산혁명의 연장선 상에서 전개되는 민주화 운동임을 대내외에 드러냄.
- ◆ 특히 10월 1일 시위에서 경찰이 쏜 실탄에 시위대 중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은 중국 기업 및 언론사, 친중 재벌의 점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중국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⁶⁾ 한편 홍콩의 범민주 진영 인사들을 향한 친중파 소행으로 추정되는 ‘백색 테러’도 잇따라 발생하여 시위의 과격성과 폭력성을 증폭시킴. 홍콩 정부는 10월 5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5천 명 이상의 시위대를 체포하는 강경 대응에 나섬.⁷⁾ 시위로 체포된 시민들 중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폭동죄로 기소됨.⁸⁾
- ◆ 시위대는 (1) 범죄인 인도법 철회, (2)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3) 시위대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 (4)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5)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시위를 지속.⁹⁾ 홍콩 고등법원이 11월 18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홍콩정부는 11월 22일 강경파인 크리스 탕을 경찰 총수인 경무처장으로 임명하며 더욱 강경한 시위 진압에 나섬. 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홍콩이공대 내 시위대가 경찰의 전면 봉쇄로 1천여 명이 체포되고, 이중 상당수가 폭동죄로 기소되었으며, 체포된 시위대의 수는 전체 4천 5백 명을 넘

어섬. 중국 인민해방군의 투입 가능성 제기와 경찰의 초강경 진압 속에서 시위는 급격히 위축.¹⁰⁾

다. 선거와 참여 민주주의

- ◆ 시위가 소강된 후 홍콩 시민들은 구의원 선거에 대한 유례없는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와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범민주파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선거를 통해 표출.
- ◆ 11월 24일 열린 홍콩 구의원 선거는 홍콩 정부에 대한 홍콩 시민의 일종의 신임 투표로서의 의미를 지님. 전체 413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294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71.2%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여 시위를 통해 고양된 홍콩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열망이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이어졌음을 보여줌. 투표 결과 범민주파가 전체 452석 가운데 85.8%인 388석을 차지하고 18개 구 가운데 17개의 구에서 다수당이 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반면, 친중 성향의 건제파는 13.3%인 60석을 얻는데 그침. 유권자의 전체 지지에 있어서는 범민주파 후보들은 57%의 득표를 얻었으며, 건제파는 41%의 지지를 받음. 이전까지 건제파가 327석, 범민주파가 118석으로 18개 모든 구의회에서 건제파가 다수당을 차지하였으나 이번 선거로 구의회에서의 세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홍콩 정부와 중국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이러한 선거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¹¹⁾
- ◆ 그러나 람 행정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41%의 유권자가 친중국 진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폭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라 유리한 해석을 내린 후,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 중 이미 받아들인 송환법 철회 이외의 다른 것들은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표명.¹²⁾ 중국 언론 역시 범민주 진영이 의석의 과반을 얻으며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두 진영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는 해석을 내려 선거의 의미를 축소.¹³⁾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구의원 선거결과가 홍콩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며, “홍콩을 어지럽히거나 그 번영과 안정을 손상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 경고.¹⁴⁾
- ◆ 범민주파에 의한 구의원 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문제는 현재의 선거체제 속에서 홍콩인들의 민심과 요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부에 반영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투표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적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님. 구의

현재의 선거체제 속에서 홍콩인들의 민심과 요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부에 반영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

회 선거에서 범민주파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만든 독특한 선거제도로 인해 홍콩이 선거를 통한 정치적 변화를 이끄는 것이 불가능. 홍콩에는 지방자치 의회인 구의회, 입법기관인 입법회, 그리고 최고 수반인 행정장관 중에서 구의원만 직선으로 뽑는 선거제도를 운영. 반면, 입법회는 직선제와 간선제의 혼합, 행정장관은 간선제에 의해 선거를 치름. 행정장관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선거인단 1,200명 가운데 직능별 선거인단, 입법회 대표, 전인대 대표, 종교계 대표 등 상당수 선거인단을 친중파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간선제가 유지된다면 2022년 행정장관 선출에서 범민주파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¹⁵⁾

3. 일국양제의 모순

가. 일국양제의 성격과 한계

- ◆ 영국의 식민지 통치 시기 동안 영국은 주민의 참정권이 배제된 민주주의 없는 정치 구조 속에서 경제적 자유와 법치를 누리는 독특한 체제를 홍콩에 구축하여 운영. 홍콩의 지리적 위치, 식민 지배 하의 정치적 안정, 상대적으로 발전된 항만시설 등은 홍콩이 중국 대륙과 서방 세계를 잇는 주요 중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형성.¹⁶⁾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중국과의 교역항의 기능이 어려워지자 홍콩은 대륙에서 이주한 대량의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의 제품 생산 기지로 변신하여, 섬유, 화학, 전자공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발전시키며 경제적 번영을 누림.¹⁷⁾
- ◆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해외 정부와 기업들에 의한 자본, 기술, 경영기법의 제공을 필요로 했고, 대부분 중국계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홍콩의 기업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됨.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던 홍콩은 생산과 조립 공장을 중국 남부에 이전시키고 홍콩을 서비스 부문의 중심으로 전환시켰고, 선전 지역의 경제특구 형성과 함께 중국과 홍콩의 분업적 협력은 중국의 제조업 발전과 홍콩의 설계, 유통, 판매 및 금융 중심지로서의 발전을 가져옴.¹⁸⁾
- ◆ 그러나 홍콩의 정치발전은 영국에서 독립한 다른 탈식민지 국가들과는 상이한 경로를 밟게 됨. 영국 지배 시기 동안 대의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이후 홍콩 내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 영국이 홍콩에게 150년간 시행하지 않았던 민주주의를 중국으로 하여금 실행할 것

홍콩은 생산과 조립 공장을 중국 남부에 이전시키고 홍콩을 서비스 부문의 중심으로 전환

을 요구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중국에게 제공. 대의제 정부의 도입을 통한 홍콩인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개혁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그러나 중국의 내전, 공산화, 정치적 불안으로 대규모 인구가 홍콩에 유입되었고, 이들 중국계 주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치정부에 대한 요구보다 경제적 생존을 우선시하였음. 영국 역시 홍콩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홍콩의 치안력이 이러한 도전에 준비되지 않음을 우려하였음. 홍콩 정부는 중국의 공산당, 대만의 국민당 등 외부의 정당들이 홍콩에 지부를 두는 것을 금지하였음.¹⁹⁾

- ◆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영국과 중국 사이에 타협을 이끌어 낸 일국양제는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일당독재에 기반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사이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한시적인 방편으로 고안됨. 중국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홍콩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홍콩의 경제제도, 재산권, 독립적인 관세권, 독자적인 화폐(홍콩달러), 외국과의 경제교류 등 홍콩의 경제 시스템을 최소 50년간 인정하는데 합의. 이는 홍콩에 대한 주권 확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중국과 홍콩반환 이후에도 영국과 서구자본이 갖춰놓은 홍콩의 기본질서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던 영국의 이해가 만나 이루어진 결정이었음.²⁰⁾
- ◆ 문제는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일국양제”에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영국은 “일국양제”에 의한 홍콩의 자치에 대한 보장이 민주주의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반면, 중국은 홍콩에 대한 자치를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해석하였으며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완전한 자치가 “일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음. 영국은 홍콩 반환 직전 향후 “양제”의 틀 속에서 유지될 홍콩의 제도적 속성에 민주주의를 하나의 기정사실로 포함시키기 위해 홍콩에 민주적 제도와 가치를 이식시키려고 함. 그러나 그동안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시행하지 않던 영국의 이러한 행동을 ‘위선적’인 행동이자 홍콩을 준독립국화하여 홍콩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을 반환 이후에도 지속시키려 한다는 중국 측의 반발로 결국 무산됨.²¹⁾

일국양제는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일당독재에 기반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사이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한시적인 방편으로 고안됨

나. 반환 후 홍콩의 문제

- ◆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중국 반환 직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미국의 9.11 사건, 중증호흡기질환(사스)의 창궐로 홍콩은 1998년, 1999년, 2002년, 2003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2003년 중반에는 역대 최고의 실업률(8.7%)을 기록.²²⁾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주택수를 확대하고자 했던 홍콩 정부의 계획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긴축정책에 의해 폐기.

홍콩이 중국의 다른 여느 도시들 중 하나로 전환되고 있다는 인식 속에 “홍콩이 죽어간다”는 우려가 홍콩 시민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기 시작

이에 따라 홍콩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져, 1997년 초 홍콩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90%였으나, 2003년 말에는 51%로 떨어짐.²³⁾

- ◆ 홍콩 경제는 반환 이후 상대적인 위상이 점점 쇠퇴. 1997년 홍콩은 중국 전체 GDP에서 1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3% 미만으로 축소.²⁴⁾ 외국인 투자의 2/3가 여전히 홍콩에 집중돼 있지만, 상하이가 금융 분야에서, 선전이 혁신 분야에서 홍콩과 경합을 벌이게 됨.²⁵⁾ 1980년대 홍콩의 GDP는 선전의 164배였으나 2016년에는 2배로 좁혀지고, 홍콩 경제는 2003년 중국 광둥성에 역전당함. 홍콩이 중국의 다른 여느 도시들 중 하나로 전환되고 있다는 인식 속에 “홍콩이 죽어간다”는 우려가 홍콩 시민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기 시작.²⁶⁾
- ◆ 중국과의 통합과 교류의 확대는 사회적으로도 홍콩 내부에 문제와 불만을 야기. 관광, 쇼핑, 진학, 취업, 거주, 그리고 사회서비스 소비를 위한 중국 대륙인들의 홍콩 유입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경쟁을 홍콩 내에 가져옴. 자녀의 홍콩 거주권 획득과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임신한 대륙여성들의 홍콩 유입이 2011년 한해에만 43,000명에 달했고, 이는 홍콩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 2014년에 중국인 관광객은 홍콩 전체 인구의 네 배가 넘는 규모로 증가하는데, 소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필품을 홍콩에서 사재기하는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생필품 부족 문제가 발생.²⁷⁾
- ◆ 중국인들이 홍콩 부동산을 대거 매입함으로써 홍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 미국이나 영국의 유수 대학을 졸업한 중국 본토의 젊은이들이 홍콩에 몰려들면서 고수입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국인들에게 빼앗긴다는 불만이 높아짐.²⁸⁾ 2018년 홍콩의 빈부격차는 45년만에 최대를 기록하였고, 전체 인구 중 137만 명이 빈민층으로 분류됨.²⁹⁾ 집값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특히 젊은 층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이들은 2019년 시위에 대거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이는 홍콩시위가 단순히 과거 영국 식민지 시기에 대한 막연한 향수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반환 이후 홍콩에서 나타난 내부적 문제와 이로 인한 불만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

다. 일국양제의 정치적 위기

- ◆ 홍콩 반환 이후 나타난 사회 및 경제적 문제의 발생과 함께, 중국이 “일국”적 요소를 홍콩에 강제하려는 시도로 인해 정치적인 갈등과 위기가 촉발. 이는 2003년 ‘국가안전법’의 입법 시도, 2012년 민족주의 교육을 학

교에 도입하려는 시도, 그리고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둘러싼 일련의 갈등과 시위를 통해 표면화.

- ◆ 2003년 홍콩정부는 ‘기본법’ 23조의 반역, 국가분열, 반란 선동, 중앙인 민정부의 전복 및 국가 기밀의 절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가안전법의 법제화를 시도.³⁰⁾ 이는 2002년 중반 중국정부가 기본법 23조와 관련된 입법의 통과를 원한다고 표명한 이후 이루어진 일이었음. 그 해 7월 1일 홍콩 시민 50만 명이 국가안전법 입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 홍콩인들은 이 법이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 홍콩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홍콩 정부는 그 해 9월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안전법의 입법 초안을 철회하고, 얼마 뒤 행정장관이 자신의 임기만료 2년을 남겨두고 사퇴.³¹⁾
- ◆ 2012년 민족주의 교육 반대운동은 2007년 7월 홍콩반환 10주년 기념식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청소년에 대한 국민교육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후 홍콩정부가 초등과정에서 중학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국민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발생. 홍콩정부와 중국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홍콩 학생들에게 국가와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으며, 국민교육과정은 중국 대륙에서 시행되는 애국주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것이었음. 교재에는 중국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진보, 공평, 단결의 정당임을 강조하고 서구의 다당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갈 계획이었음. 홍콩 시민들은 국민교육과정의 도입을 홍콩의 반정부, 반체제 세력의 성장과 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세뇌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시민단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결집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전개. 홍콩정부는 2012년 10월 8일 ‘국민교육과정’의 도입을 철회.³²⁾
- ◆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전개된 2014년 우산혁명은 앞의 두 번의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홍콩 시민들이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요구를 시위를 통해 표출한 사건임.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간 우산혁명은 2019년 송환법 사태를 둘러싼 시위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시민운동이었음.
- ◆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최초로 보통선거에 기반하여 실시한다고 발표. 그러나 초·중등학교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려던 중국의 정책이 홍콩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자 중국정부는 홍콩인들의 “마음”이 아직 “모국”으로 돌아오지 않았

홍콩 시민들은 국민교육과정의 도입을 홍콩의 반정부, 반체제 세력의 성장과 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세뇌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

홍콩 시민들은 보편적인 선거권에 기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행정장관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며 2014년 9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센트럴점령운동”으로 불리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

고 홍콩사회 상당수가 중국과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³³⁾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2014년 8월 31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을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보통선거로 선출하는 퇴보된 형태의 선거 방식을 공표. 그러나 홍콩의 경제계, 전문가집단, 정치계, 사회종교계에서 각각 300명씩 선발된 1,200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후보자 추천은 이들 선거위원회의 위원들을 친중인사로 채워 행정장관을 중국정부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 비판받음.³⁴⁾

- ◆ 홍콩 시민들은 보편적인 선거권에 기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행정장관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며 2014년 9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센트럴점령운동”으로 불리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 시위 참여자들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한 후보자 제한 방식을 철회하고 보편선거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 반면 중국 정부는 홍콩의 선거제도는 중국의 법적 특성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센트럴점령운동”은 불법임을 선언. 비록 센트럴 지역은 점거되지 못했지만 홍콩의 주요 지역에서 시위, 점거 및 경찰과의 대치가 발생.³⁵⁾ 경찰의 최루가스를 막기 위해 펼쳐든 “노란우산”이 “우산혁명”의 상징이 된 것처럼 평화시위로 전개된 홍콩시위는 정부의 강경진압에 의해 종료됨.
- ◆ 우산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종료된 다음 해인 2015년 홍콩 정부는 중국 전인대 결정에 따른 선거안을 발표했으나, 범민주파의 반대로 입법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됨. 결국 중국과 홍콩정부의 선거안과, 홍콩시민들이 요구하던 입후보 자격의 제한이 없는 보편선거를 통한 선거방식 어느 쪽도 수용되지 못한채 2017년 행정장관 선출은 기존대로 간접선거를 통해 이루어졌고, 친중파로 분류되는 캐리 램이 신임 행정장관으로 선출됨. 행정장관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이후 2019년 시위로 이어짐.³⁶⁾

4. 홍콩문제를 둘러싼 갈등

가. 민주주의와 법치

- ◆ 일국양제 방식에 의한 통합으로 야기된 홍콩 내 사회·경제적 문제와 2000년대 이후 전개된 일련의 시위를 통해 홍콩인들은 일국양제에서 “양제”보다는 “일국”이 강화되면서 “양제”의 한 축인 홍콩의 기존 제도가 위협받고 있으며,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아닌 홍콩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책임성을 지니는 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확보해야 함을 자각하기 시작. 2019년 홍콩시위는 자신들의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홍콩시민들의 집단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³⁷⁾

- ◆ 송환법 제정에 대한 반대는 홍콩인들이 중국의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사법체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이전부터 중국정부가 홍콩내 반중국적 인사들에 대해 가한 억압과 탄압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함. 2015년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 내의 정치투쟁에 대한 책을 파는 서점을 운영하던 다섯 명의 출판인이 각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부는 홍콩에서 사라졌고 한 명은 태국에서 실종되었음. 실종 이후 이들은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중국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³⁸⁾
- ◆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왕(黃之鋒)은 선관위에 의해 올해 11월 24일 실시된 구의원 선거에서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함. 선관위는 그가 홍콩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지지와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명. 선관위는 ‘홍콩 독립’이 기본법에 규정된 “일국양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에게 선거 출마 자격을 주지 않음. 선관위가 선거 후보가 속한 정당의 강령을 문제 삼아 후보 자격을 박탈한 사례는 2016년 이후 10건에 달함.³⁹⁾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홍콩인들은 홍콩의 인권과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인식. 2018년 상반기 홍콩인들이 인권과 자유의 보호를 위한 홍콩 정부의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과 “대체로 긍정”으로 답한 비율은 36%였던 반면, “매우 부정”과 “대체로 부정”으로 답한 사람은 49%에 달함.⁴⁰⁾
- ◆ 중국정부는 사법부와 법집행 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국가의 임의적 권력에 대한 제약이라는 법치 개념과는 상이한 법치에 대한 관점을 표명해 왔음. 2012년 시진핑은 중국의 법체계가 당의 지휘 하에 있어야 하고 중국은 사법 독립이라는 서구의 길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혀, 중국의 법치가 중국공산당의 지배 하에 종속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서구와는 다른 중국적인 방식임을 주장.⁴¹⁾
- ◆ 2014년 “우산혁명” 당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홍콩에서의 시위가 법치주의 붕괴의 출발점이라 지적하며, 센트럴 점령 시위가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주장함. 신화통신은 당시 시위 지도부에 “홍콩 사회를 점차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

시진핑은 중국의 법체계가 당의 지휘 하에 있어야 하고 중국은 사법 독립이라는 서구의 길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혀

하기 위해, 법치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고 비판하며, “법치주의는 홍콩 번영과 안정의 초석”이라 주장을 통해 법치 개념을 시위대를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하였음.⁴²⁾

- ◆ 2019년 시위에서도 중국의 관영 언론 매체들은 시위의 혼란스런 모습들에 초점을 두며, 시위자들을 외국의 “검은 손(Black Hand)”들과 결탁한 소수의 폭력적인 분리주의자들로 묘사하며, 홍콩의 “폭도들”은 분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⁴³⁾ 즉,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법치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홍콩경찰이 이들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함으로써 홍콩의 법치를 지키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중국정부 역시 시위참여자들을 ‘폭도’와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을 도시의 안정과 질서 회복을 통한 법치 수립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음.
- ◆ 시진핑 주석은 11월 4일 상하이에서 캐리 램 장관을 만나 “법에 따라 폭력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하는 것은 홍콩의 광범위한 민중의 복지를 수호하는 것이니 절대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⁴⁴⁾ 또한 11월 14일 “홍콩에서 계속해 과격한 폭력 범죄 행위가 벌어져 법치와 사회 질서를 짓밟고 있다”며,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밝힘. 이 발언 이후 11월 17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수십 명이 주둔지에서 나와 도로를 청소하는 작업을 40여 분간 진행하여 홍콩 사태에 중국이 무력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과시함.⁴⁵⁾

나. 자치와 통일된 중국

- ◆ 중국의 입장에서 홍콩의 주권회수는 과거 아편전쟁으로 영국에게 당했던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미와 함께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중국의 국내적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20년 전 홍콩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고, 민족이 겪은 100년 동안의 굴욕을 씻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이루었다”고 평가함.⁴⁶⁾ 중국에게 홍콩의 정치적 불안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티벳이나 신장과 같이 중국 내 분리주의 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체제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인식함.
- ◆ 중국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홍콩 내에서의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홍콩의 독립 주장으로 이어져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임. 중국이 홍콩에게 민주

중국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홍콩 내에서의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홍콩의 독립 주장으로 이어져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임

주의에 기반한 완전한 자치를 허용할 경우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구나 자치주도 “우리도 홍콩처럼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겠다”고 요구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임.⁴⁷⁾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에 도전한다고 비난하며, 홍콩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한 자치 요구를 “분리주의”의 일환으로 묘사하여 홍콩 시위가 정당성이 부재하며 중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강조.⁴⁸⁾

- ◆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국민들의 홍콩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민족주의와 홍콩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기에 호소하며 생성 및 강화시키려 시도. 홍콩인들을 다른 중국인들보다 더 많은 자유와 번영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시위를 조종하는 외국인들(특히 미국인)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조국을 저버린 사람들로 묘사함.⁴⁹⁾ 또한 홍콩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홍콩을 신장, 티벳과 같은 범주에 넣음으로써 홍콩에 대한 강경한 수단들이 국가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가 홍콩 독립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타협 불가능한 민족적 영토의 통합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음.⁵⁰⁾
- ◆ 그러나 홍콩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독립에 대한 요구와 동일하지 않음. 시위대 중 일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홍콩 독립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홍콩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자신들의 헌법 체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홍콩인들의 투쟁은 일국양제가 본래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며, 자치는 독립과 같지 않다고 생각함.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를 분리주의자들로 부르지만 독립은 이번 시위의 주된 요구가 아니었음.⁵¹⁾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가 홍콩 독립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타협 불가능한 민족적 영토의 통합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음

다. 인권과 주권의 충돌

- ◆ 홍콩 시위는 홍콩 및 중국 정부와 시위에 참여한 홍콩 시민 사이의 갈등과 대립뿐만 아니라 시위를 지지하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였고, 한 국가 또는 지역 및 도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국제적인 성격을 띠 수 있는가를 보여줌.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는 주권국가의 권리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두 가지 주요 규범의 충돌이 자리잡고 있음.
- ◆ 홍콩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대한 강경 진압에 나선 홍콩정부와 중국을 앞장서 비판했던 것은 미국임. 특히 시위를 벌이던 고교생의 실탄 피격 후 미국하원 외교위원회 등에 소속된 의원 21명은 성명을 통

홍콩 인권법은 미 정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 범죄를 일으킨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음

해 홍콩 경찰과 중국 중앙정부를 강력하게 비난. 이들은 “시진핑 주석이 30년 전 학살이 일어났던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할 때 홍콩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바로 옆에서 쓴 총에 맞았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절대권력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보여준다”고 비판.⁵²⁾

- ◆ 홍콩 사태를 둘러싼 중국과 국제사회의 갈등은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띠. 홍콩 인권법은 미 정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 범죄를 일으킨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음.⁵³⁾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홍콩 인권법은 매년 홍콩의 자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이며, 하원은 10월 만장일치로 홍콩 민주주의 법안을 가결함.⁵⁴⁾
- ◆ 2019년 11월 19일 미국 상원 역시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법안 통과 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이든, 중국 북서부든,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든 자유의 억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홍콩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한다면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⁵⁵⁾ 또한 11월 26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홍콩의 자율성, 법치에 대한 충실,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미국법 하에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국양제와 앞으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힘.⁵⁶⁾
- ◆ 중국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7일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취지를 설명함.⁵⁷⁾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부부장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어떠한 외국 정부와 외국 세력도 간섭하도록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경고. 그는 “미국이 홍콩 인권법안 추진과 중국 내정 간섭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며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 경고. 경상(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제 불에 타 죽지 않도록 즉시 해당 법안의 입법을 막는 조치를 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 경고.⁵⁸⁾

- ◆ 중국 정부는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홍콩인권법안은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며 적나라한 패권 행위로 중국 정부와 인민은 강력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항의.⁵⁹⁾ 중국 외교부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폭력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몹시 나쁜 행동으로 홍콩의 번영과 안정, 일국양제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과정 실현을 파괴하는 것”이라 비판. 그리고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외국 정부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은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일국양제 관철과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⁶⁰⁾

5. 홍콩사태의 의미와 향후 전망

가. 일국양제 속의 홍콩의 미래

- ◆ 홍콩의 기본법은 2047년에 만료되며 그 이후 홍콩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한 상황. 이번 2019년 홍콩시위는 그 동안 축적된 일국양제의 문제점을 시민과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대치하는 방식으로 표면화시켰다는 점에서 기본법 만료 이전까지 일국양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음.
- ◆ 중국은 홍콩의 정치체제를 현상태로 둔채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려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보다 많은 시위와 보다 강도 높은 폭력을 야기함으로써 중국 대륙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기지라는 홍콩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며,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 상실은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⁶¹⁾ 홍콩의 경제는 여전히 중국에서 유용함. 높은 신용도를 지니고 있으며 달러를 쉽게 처분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독립적인 구성원이며, 미국, 유럽, 일본에 필적하는 증권시장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홍콩은 중국에게 서구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구임.⁶²⁾ 글로벌 자산운용 회사들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가 훼손되고 정치적 불안정이 증폭된다면 언제든지 싱가포르 등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음.⁶³⁾ 홍콩의 법치와 자유가 훼손되고, 홍콩이 독립 자치구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혜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홍콩에 기반을 둔 국제적 기업과 금융 기관들 중 많은 수가 홍콩을 떠날 것이고, 이는 중국에게 서구와의 중요한 금융 가교를 상실하는 피해를 줄 것임.⁶⁴⁾
- ◆ 시진핑 정부에 의한 일대일로 정책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것임. 중국은 2015년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이 국가적인 의제로 본격화하고,

홍콩의 기본법은 2047년에 만료되며 그 이후 홍콩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한 상황

그해 3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에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 주하이 형친 등 개방협력지역의 기능을 활용하여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⁶⁵⁾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기 위해 주강 삼각주 지역 내에 경제통합을 목표로 홍콩정부와 함께 경제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은 일대일로의 바다 실크로드의 출발점임.⁶⁶⁾

- ◆ 현재의 일국양제 틀 속에서 중국의 용인 하에 홍콩의 민주화가 가능할 것 인지는 불확실함. 홍콩시위에 대한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의 지지는 홍콩시위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중국으로 하여금 홍콩시위를 외세와 결탁한 “폭동” 또는 “분리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 역시 미쳤음. 티벳, 위구르 등 중국 내 분리주의 움직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홍콩의 민주주의 보장은 다른 지역에도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줌. 나아가 홍콩에 대한 양보는 자치와 독립을 추구하는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 지역에 대해 외세의 지지와 후원을 확보하면 중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을 중국 정부는 우려할 것임.

홍콩에 대한 양보는 자치와 독립을 추구하는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 지역에 대해 외세의 지지와 후원을 확보하면 중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

나. 홍콩과 양안 관계

- ◆ 홍콩 시위와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관계 뿐만 아니라 대만의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국양제의 위기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임. 일국양제에 기반하여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하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취함에 있어 그것이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하기에 홍콩 문제는 홍콩과 중국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양안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의 연결 고리에 묶여 있음.
- ◆ 홍콩 시위는 2020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대만의 국내정치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음. 중국 경제에 대한 대만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탈중국 정책은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초래하였고, 대만 경제가 어려워지며 차이 정부는 2018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음. 그 여파로 2019년 상반기까지 차이 총통은 국민당 한귀위(韓國瑜) 후보에게 지지도에서 밀리고 있었음. 그러나 홍콩 사태가 격화됐던 7월부터 반중 정서와 일국양제에 대한 회의가 거세지면서, 10월 25일 여론조사에서 차이 총통이 52%의 지지율을 얻는 반면 한귀위 후보는 39%에 머무른 지지율 역전이 벌어짐.⁶⁷⁾

- ◆ 차이 총통은 홍콩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이번 사건은 일국양제는 통일의 방식으로 부적절하며, 특히 민주화된 대만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⁶⁸⁾ 또한 일국양제를 수용하면 대만의 생존 공간이 없어질 것이며, “우리와 멀지 않은 홍콩은 일국양제 실패로 무질서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⁶⁹⁾ 11월 25일 대만 총통 부 대변인은 대만정부가 홍콩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며 북경과 홍콩 정부가 홍콩에 대해 약속한 민주주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⁷⁰⁾
- ◆ 홍콩에서의 시위는 대만인들로 하여금 일국양제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음. 대만인들은 홍콩의 시위자들이 권위주의적 중앙정부의 포위에 맞서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함. 2019년 8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57%의 대만인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 반면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19%에 머물렀음.⁷¹⁾ 홍콩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대만 내 여러 집단들이 방독마스크, 공기 필터, 헬멧을 시민들이 낸 기부금으로 구입하여 홍콩으로 보냄. 170만 홍콩 달러(미화 5만 4천 8백 달러) 이상이 시위대를 위한 보호 장구 구입을 위해 모금되었고, 1,400개 가량의 방독 마스크와 13,000개 이상의 공기 필터가 8월과 9월 초 사이에 홍콩에 보내졌음.⁷²⁾
- ◆ 중국이 앞으로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홍콩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일국양제의 틀 속에서 대만을 통합하려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지지율과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⁷³⁾ 반대로, 홍콩과 중국 정부가 갈등과 대치의 국면을 원만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중국이 대만과 통일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국양제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증진을 강조하는 국민당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높아질 것임.⁷⁴⁾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일국양제의 틀 속에서 대만을 통합하려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

다. 중국의 세계 구상과 홍콩

- ◆ 홍콩 사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운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제전략과 향후 국제정치 속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임.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모델’과 ‘중국의 평화적 부상(和平崛起)’과 같은 개념과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음. 이는 내부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에 의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안정과 번영, 외부적으로는 하나의 상업적 공간의 창출을 통한 지구적 차원의 이익의 수렴을 내용으로 함.

**중국의 대응에 따라 권
위주의적 슈퍼파워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국
제사회의 수용과 거부
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 특히 ‘평화적 부상’의 개념은 공산주의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군사 및 경제적 갈등에 대한 서구의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음.⁷⁵⁾ 비서구 국가임과 동시에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지배적 강대국이 되었을 때 기존의 세계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주요 서구 강대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중국정부는 중국 주변의 저발전 국가들을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대규모 기초 인프라 건설 투자로 중국과 주변 국가를 연결하려는 전략으로서, 중국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저개발 국가를 도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방식으로 국제적인 이미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⁷⁶⁾
- ◆ 홍콩 시위는 시진핑의 정치적 수완과 중국이 과연 국제무대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음. 중국 공산당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자신의 권위주의적 성향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사람과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식을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국제사회는 홍콩사태를 통해 주시하고 있음.⁷⁷⁾
- ◆ 홍콩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권위주의적 슈퍼파워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용과 거부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 홍콩 문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고,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주변국의 참여를 더욱 쉽게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만일 홍콩에서 강경진압을 통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홍콩문제가 장기적인 갈등과 폭력을 낳는다면, “평화로운 부상”을 통한 중국의 국제적 역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중국의 외교적 개방 노력, 대만과의 통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화 대국 건설”의 꿈은 신기루가 될 것임.

참고문헌

- 강혜란. 2019. “캐리 램 몰아내도 막막한 홍콩...” 어떻게 뽑아도 친중파 당선,” 『중앙일보』 (6/18).
- 구정은. 2019. “거리에서 투표소로, 홍콩의 ‘세 번째 싸움’이 남긴 것들,” 『경향신문』 (11/26).
- 김용민·김준호. 2018. “중국의 대 홍콩 경제통합정책,” 『동북아연구』, 제33권 1호. pp. 63-90.
- 박광득. 2017. “홍콩반환 20년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5집, 4호, pp. 213-233.
- 박은경. 2019. “차이잉원, 대만 국경절 연설서 “일국양제 수용하면 생존공간 없어져,” 『경향신문』 (10/10).
- 벨라르, 마르틴. 2019. “홍콩의 분노, 지정학적 화약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제 132호 (9월호), pp. 1-39.
- 오원석. 2019. “홍콩 친중파 역사상 가장 큰 참패에...중 “서방 세력 개입 탓,” 『중앙일보』 (11/25).
- 연합뉴스. 2019. “신화통신 “센트럴 점령시위가 홍콩 법치주의 붕괴의 출발점.” (9/30).
- 연합뉴스. 2019. “홍콩 시위대 실탄 맞아 중상...시진핑 초상 불태우며 ‘애도 시위.’ (10/2).
- 연합뉴스. 2019. “시위 고교생에 실탄 쓴 홍콩 경찰에 국제사회 비난 고조.” (10/2).
- 연합뉴스. 2019. “고교생 피격 이어 언론인 경찰 고무탄에 실명...홍콩 시위 격화.” (10/3).
- 연합뉴스. 2019. “홍콩 시위 주역 조슈아 왕, 11월 지방선거 출마 금지당해.” (10/29).
- 연합뉴스. 2019. “홍콩 시위 150일...체포된 시민 3천명 넘어섰다.” (11/4).
- 연합뉴스. 2019. “주권이나 인권이나 홍콩시위 놓고 중-서방 정면충돌.” (11/13).
- 연합뉴스. 2019. “흔들리는 일국양제...시진핑 좌불안석.” (11/17).
- 연합뉴스. 2019. “혼란 장기화에 금융중심 위상까지 흔들.” (11/17).
- 연합뉴스. 2019. “전쟁터 홍콩시위...차량 돌진에 중국군 막사 인근서 실탄 쏘.” (11-18).
- 연합뉴스. 2019. “홍콩 시위 격화 속...미 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11/20).
- 연합뉴스. 2019. “200여명 폭동죄 기소 초강수...홍콩시위대 기세 꺾기.” (11/20).
- 연합뉴스. 2019. “홍콩선거 ‘민심의 분노’ 보여줘...시위대에 큰 힘 실릴 듯.” (11-25).
- 연합뉴스. 2019. “홍콩 캐리 램, 선거 참패에도 “시위대 요구 수용 못해.” (11/26).

- 연합뉴스. 2019. “홍콩정계 지각변동 범민주 확보 행정장관 선거인단 40% 육박.” (11/26).
- 연합뉴스. 2019. “중, 트럼프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대사 조치’ 강력 항의.” (11/28).
- 연합뉴스. 2019. “트럼프의 홍콩인권법 서명에 중 “패권 행위” 강력 반발.” (11/28).
- 유상철·이승호·오원석. 2019. “미국 상원 홍콩인권법 통과..중국 “내정간섭” 보복 예고,” 『중앙일보』 (11/21).
- 윤완준. 2019. “시위대 요구 5개 중 2개만 수용해도 시민 80%는 안 나설 것,” 『동아일보』 (9/2).
- 윤완준. 2019. “밖으론 “인류공동체” 안으론 “중화민족 부흥”...14억명 단결에 방점,” 『동아일보』 (9/28).
- 윤완준. 2019. “우산혁명-반중시위 젊은 주역들 대거 당선,” 『동아일보』 (11/26).
- 윤완준. 2019. “388:60...홍콩 선거 반중진영 압승,” 『동아일보』 (11/26)
- 이승신 외. 2019.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 및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9-15 (8월 28일), pp. 1-17.
- 이중화. 2018. “홍콩의 집단 기억과 시위 그리고 정체성 정치,” 『중소연구』, 제42권 제3호, pp. 157-189.
- 전채은. 2019. “우산혁명 5주년...홍콩 곳곳서 ‘시진핑 사진 밝기,’” 『동아일보』 (9/30).
- 정용환. 2019. “홍콩 지켜보던 대만인들 “독립 필요없어...지금처럼 살겠다,” 『중앙일보』 (11/6).
- 채인택. 2019. “홍콩 시위 모른다 말했다 역풍...대만 ‘친중’도 돌아선다,” 『중앙일보』 (7/11).
- 채인택. 2019. “홍콩선거 민주파 압승해도..중 웃는다, 그 뒤엔 기묘한 칸막이,” 『중앙일보』 (11/26).
- Bush, Richard C. 2016. *Hong Kong in the Shadow of China: Living with the Leviatha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Delaney, Robert, and Keegan Elmer. 2019. “US Ambassador Terry Branstad Expressed ‘Grave Concerns’ about Hong Kong after Chinese Protest over Human Rights Act,”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26).
- Ho, Wing-Chung, and Emilie Tran. 2019. “Hong Kong-China Relations over Three Decades of Change: From Apprehension to Integration to Clashes,”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17 (1): 173-193.
- Hui, Victoria Tin-bor. 2019. “Hong Kong Citizens Just Voted for More Democracy. What Happens Now?,” *The Washington Post* (Nov. 26).
- Lee, Ching Kwan. 2019. “What’s Happening in Hong Kong after Nearly Three Months of Protest?,” *The Washington Post* (Aug. 22).
- Melchior, Jillian Kay. 2019. “Hong Kong’s Revolutionary Turn.” Wall Street

- Journal (October 24).
- Miller, Terry. 2019. “China Risks Hong Kong’s Economic Freedom,” *Wall Street Journal* (May 21).
- Qin, Amy. 2019. “A Father-Son Split on Hong Kong Protests Shows City’s Generational Divide,” *The New York Times* (Sep. 28).
- Rigger, Shelly. 2019. “Why Taiwan Is Watching Hong Kong Very Closely,” *The Washington Post* (Sept. 4).
- Sala, Liaria Maria. 2019. “After the Protests: How Will Hong Kong Vote?,” *The New York Times* (Nov. 22).
- The Economist. 2019. “Extradition: Back to the Mainland.” (April 6), pp. 53-54.
- The Economist. 2019. “Hong Kong.” (June 15), p. 9.
- The Economist. 2019. “Protest in Hong Kong.” (June 15), pp. 18-20.
- The Economist. 2019. “Unrest in Hong Kong: China’s Chance.” (June 22), p. 11.
- The Economist. 2019. “Reclaiming Hong Kong: Protest, But No Movement.” (Aug. 3), p. 49.
- The Economist. 2019. “Turmoil in Hong Kong: Airport Mayhem.” (Aug. 17), pp. 16-18.
- The Economist. 2019. “Social Stability, Shutting the Gate.” (Sept. 14), pp. 58-59.
- Vukovich, Daniel. 2015. “Illiberal China and Global Convergence: Thinking through Wukan and Hong Kong,” *Third World Quarterly*, 36 (11): 2130-2147.
- Wang, Joyu. 2019. “Taiwan Rallies for Hong Kong to Resist Beijing’s Influence,” *Wall Street Journal* (Sept. 29).
- Yeung, Chris. 2018. “Human Rights in Hong Kong: One Country Looms as Two Systems Fade,” *Contemporary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trategic Rel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4 (2): 431-449.
- Zheng, Sarah. 2019. “Face the Will of the People, Taiwan’s Main Political Parties Urge Hong Kong’s Government,” *South China Morning Post* (Nov. 25).
- Zheng, William, and Echo Xie. 2019. “Hong Kong Election Result a ‘Wake-up Call’ for China but Will It Listen?,” *South China Morning Post* (Nov. 25, 2019).

주 석

- 1) 마르틴 벨라르, “홍콩의 분노, 지정학적 화약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제132호 (9월호, 2019), p. 7; The Economist, “Protest in Hong Kong” (June 15, 2019), p. 19.
- 2) The Economist, “Extradition: Back to the Mainland” (April 6, 2019), p. 54.
- 3) The Economist, “Protest in Hong Kong” (June 15, 2019), p. 18.
- 4) 전채은, “우산혁명 5주년...홍콩 곳곳서 ‘시진핑 사진 밝기,’” 『동아일보』 (2019/9/30).
- 5) “홍콩 시위대 실탄 맞아 증상...시진핑 초상 불패우며 ‘애도 시위,’” 『연합뉴스』 (2019/10/2).
- 6) “고교생 피격 이어 언론인 경찰 고무탄에 실명...홍콩 시위 격화,” 『연합뉴스』 (2019/10/3).
- 7) “홍콩 시위 150일...체포된 시민 3천명 넘어섰다,” 『연합뉴스』 (2019/11/4); “홍콩선거 ‘민심의 분노’ 보여줘...시위대에 큰 힘 실릴 듯,” 『연합뉴스』 (2019/11/25).
- 8) “200여명 폭동죄 기소 초강수...홍콩시위대 기세 꺾기,” 『연합뉴스』 (2019/11/20).
- 9) 윤완준, “우산혁명-반중시위 주역들 대거 당선,” 『동아일보』 (2019/11/26).
- 10) “홍콩선거 ‘민심의 분노’ 보여줘...시위대에 큰 힘 실릴 듯,” 『연합뉴스』 (2019/11/25); “200여명 폭동죄 기소 초강수...홍콩시위대 기세 꺾기,” 『연합뉴스』 (2019/11/20).
- 11) 채인택, “홍콩선거 민주파 압승해도...중 웃는다,” 『중앙일보』 (2019/11/26); Victoria Tin-bor Hui, *The Washington Post* (Nov. 26, 2019); 윤완준, “388:60...홍콩 선거 반중진영 압승,” 『동아일보』 (2019/11/26).
- 12) “캐리 램, 선거 참패에도 ‘시위대 요구 수용 못해,’” 『연합뉴스』 (2019/11/26).
- 13) 오원석, “홍콩 친중파 역사상 가장 큰 참패에...중 서방 세력 개입 탓,” 『중앙일보』 (2019/11/25).
- 14) William Zheng and Eco Xie, “Hong Kong Election Result a ‘Wake-up Call’ for China but Will It Listen?,” *South China Morning Post* (Nov. 25, 2019).
- 15) 채인택, “홍콩선거 민주파 압승해도...중 웃는다,” 『중앙일보』 (2019/11/26); “홍콩정계 지각변동’ 범민주 확보 행정장관 선거인단 40% 육박,” 『연합뉴스』 (2019/11/26).
- 16) 김용민·김준호, “중국의 대 홍콩 경제통합정책,” 『동북아연구』, 제33권 1호 (2018), p. 67.
- 17) Richard C. Bush, *Hong Kong in the Shadow of China: Living with the Leviatha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p. 8-9; 김용민·김준호, op. cit., p. 68.
- 18) Bush, op. cit., pp. 9-10; 김용민·김준호, op. cit., pp. 70-71)
- 19) Bush, op. cit., pp. 10-12.
- 20) 김용민·김준호, op. cit., pp. 64-70; 박광득, “홍콩반환 20년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25집, 4호 (2017), pp. 218-219.
- 21) 이종화, “홍콩의 집단 기억과 시위 그리고 정체성 정치,” 『중소연구』, 제42권, 제 3호 (2018), pp. 160-161.
- 22) 김용민·김준호, op., cit., pp. 72-74.
- 23) Bush, op. cit., p. 15.
- 24) “Protest in Hong Kong,” The Economist (June 15, 2019), p. 19.
- 25) 벨라르, op. cit., p. 39.
- 26) Wing-Chung Ho and Emile Tran, “Hong Kong-China Relations over Three Decades of Change: From Apprehension to Integration to Clashes,”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17-1 (2019), p. 185.
- 27) Bush, op. cit., p. 18; Ho and Tran, op. cit., pp. 185-186.

- 28) 빌라르, op. cit., p. 7.
- 29) 구정은, “거리에서 투표소로, ‘세 번째 싸움’이 남긴 것들,” 『경향신문』 (2019/11/26).
- 30) 이종화, op. cit., p. 174.
- 31) Ho and Tran, op. cit., pp. 179-182.
- 32) 이종화, op. cit., pp. 174-175.
- 33) Chris Yeung, “Human Rights in Hong Kong: One Country Looms as Two Systems Fade,” *Contemporary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trategic Rel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4-2 (2018), pp. 435-436.
- 34) 이승신 외,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 및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9-15 (2019/8/28), pp. 4-5.
- 35) Bush, op. cit., p. 2.
- 36) 이승신 외, op. cit., 7; Yeung, op. cit., 435-436.
- 37) Liaria Maria Sala, “After the Protests: How Will Hong Kong Vote?,” *The New York Times* (Nov. 22, 2019).
- 38) Yeung, op. cit., p. 446.
- 39) “홍콩 시위 주역 조슈아 왕, 11월 지방선거 출마 금지당해,” 『연합뉴스』 (2019/10/29).
- 40) Yeung, op. cit., p. 432.
- 41) “Hong Kong,” *The Economist* (June 15, 2019), p. 9.
- 42) “신화통신, 센트럴 점령시위가 홍콩 법치주의 붕괴의 출발점,” 『연합뉴스』 (2019/9/30).
- 43) “Social Stability, Shutting the Gate,” *The Economist* (Sept. 14, 2019), p. 58.
- 44) “흔들리는 일국양제...시진핑 좌불안석,” 『연합뉴스』 (2019/11/17).
- 45) “‘전쟁터’ 홍콩시위...차량 돌진에 중국군 막사 인근서 실탄 쏘,” 『연합뉴스』 (2019/11/18).
- 46) 김용만·김준호, op. cit., pp. 83-84.
- 47) 강해란, “캐리 램 몰아내도 막막한 홍콩...어떻게 뽑아도 친중파 당선,” 『중앙일보』 (2019/6/18).
- 48) “Reclaiming Hong Kong: Protest, But No Movement,” *The Economist* (Aug. 3, 2019), p. 49.
- 49) Jillian Kay Melchior, “Hong Kong’s Revolutionary Turn,” *Wall Street Journal* (Oct. 24, 2019).
- 50) Ching Kwan Lee, “What’s Happening in Hong Kong after Nearly Three Months of Protest?,” *The Washington Post* (Aug. 22, 2019).
- 51) Melchior, “Hong Kong’s Revolutionary Turn,” *Wall Street Journal* (Oct. 24, 2019).
- 52) “시위 고교생에 실탄 쏘 홍콩 경찰에 국제사회 비난 고조,” 『연합뉴스』 (2019/10/2).
- 53) 유상철·이승호·오원석, “미국 상원 홍콩인권법 통과...중국, 내정간섭 보복 예고,” 『중앙일보』 (2019/11/21).
- 54) “주권이나 인권이나 홍콩시위 놓고 중-서방 정면충돌,” 『연합뉴스』 (2019/11/13).
- 55) “홍콩시위 격화 속...미 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연합뉴스』 (2019/11/20).
- 56) Robert Delaney and Keegan Elmer, “US Ambassador Terry Branstad Expressed ‘Grave Concerns’ about Hong Kong after Chinese Protest over Human Rights Act,” *South China Morning Post* (Nov. 26, 2019).
- 57) “중, 트럼프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대사 조치’ 강력 항의,” 『연합뉴스』 (2019/11/28).
- 58) 유상철·이승호·오원석 (2019-11-21).

- 59) “중, 트럼프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대사초치 강력 항의,” 『연합뉴스』 (2019/11/28).
- 60) “트럼프의 홍콩인권법 서명에 중, 패권행위 강력 반발,” 『연합뉴스』 (2019/11/28).
- 61) “Unrest in Hong Kong: China’s Chance,” *The Economist* (June 22, 2019), p. 11.
- 62) “Turmoil in Hong Kong: Airport Mayhem,” *The Economist* (Aug. 17, 2019), p. 17.
- 63) “혼란 장기화에 금융중심 위상까지 흔들,” 『연합뉴스』 (2019/11/17).
- 64) Terry Miller, “China Risks Hong Kong’s Economic Freedom,” *Wall Street Journal* (May 21, 2019; 이승신 외, op. cit., p. 14).
- 65) 김용민, 김준호, op. cit., p. 79.
- 66) 박광득, op. cit., p. 217.
- 67) 정용환, “홍콩 지켜보던 대만인들 독립 필요없어...지금처럼 살겠다,” 『중앙일보』 (2019/11/6).
- 68) 채인택, “홍콩 시위 모른다 말했다 역풍...대만 ‘친중’도 돌아선다,” 『중앙일보』 (2019-7-11).
- 69) 박은경, “차이잉원, 대만 국경철 연설서 일국양제 수용하면 생존공간 없어져,” 『경향신문』 (2019/10/10).
- 70) Sarah Zheng, “Face the Will of the People, Taiwan’s Main Political Parties Urge Hong Kong’s Government,” *South China Morning Post* (Nov. 25, 2019).
- 71) Shelly Rigger, “Why Taiwan Is Watching Hong Kong Very Closely,” *The Washington Post* (Sept. 4, 2019).
- 72) Joyu Wang, “Taiwan Rallies for Hong Kong to Resist Beijing’s Influence,” *Wall Street Journal* (Sept. 29, 2019).
- 73) 정용환, “홍콩 지켜보던 대만인들 독립 필요없어...지금처럼 살겠다,” 『중앙일보』 (2019/11/6).
- 74) 윤완준, “시위대 요구 5개 중 2개만 수용해도 시민 80%는 안 나설 것,” 『동아일보』 (2019/9/2).
- 75) Daniel Vukovich, “Illiberal China and Global Convergence: Thinking through Wukan and Hong Kong,” *Third World Quarterly*, 36-11 (2015), p. 2131.
- 76) 박으론 “인류공동체 안으론 중화민족 부흥...14억명 단결에 방점,” 『동아일보』 (2019/9/28).
- 77) Amy Qin, “A Father-Son Split on Hong Kong Protests Shows City’s Generational Divide,” *The New York Times* (Sept. 28, 2019).

❖ 저자 약력

■ 최경준

現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조교수.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법집행의 정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과 공권력의 변화』(2018),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투영된 과거, 블랙박스 처리된 현재, 추정된 미래”(2018), “정치구조의 변화와 법치: 민주화 이후 대만의 경쟁적 정치구조와 법집행의 위기”(2017)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한유진(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